

17차 남북장관급회담

박 종 철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구실 실장

제주도에서 개최(12. 13-16)되었던 1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예정 시간을 넘기면서 어렵게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17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올 겨울에 제주도에 몰아닥친 이상 폭설의 영향을 받은 듯 한때 냉기류에 시달렸으나 결국 올해의 성과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기약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룩하였다.

17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올해의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모멘텀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05년 5월부터 시작된 남북차관급회담, 6.17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6.15 및 8.15 남북공동행사, 6자회담 재개와 공동성명 등 올해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한 해였다. 17차 장관급회담의 공동성명은 남북한이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7차 남북장관급회담은 6자회담 공동성명(9.19)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마련했다. 그러나 세부 이슈에 대한 미·북의 입장차이와 최근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로 인해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장관급회담에서 6자회담의 동력 유지가 강조된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남북장관급회담과 6자회담의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북관계의 추동력인 경협과 사회문화분야에서의 합의사항은 이번 회담의 구체적 성과다. 남북한은 남북경협이 민족 내부 사업이라는 원칙에 동의하고 경협의 규모와 지역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2단계 개발, 통행·통관·통신, 경의선·동해선 시험운행 등의 추진이 합의되었다. 올해 1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교역과 개성공단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감안하면, 남북교역 및 경협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의 보완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확인받기 위한 국내외적 조치의 필요성이 언급된 것도 적절하다.

인도주의 분야에서는 남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제외되었으나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상봉행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남북한이 태권도분야, 개성 세계문화유산 등록, 북관대첩비 이전 등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은 사회문화분야의 협력 분야를 다양화하고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해서는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되었다. 남북한은 군사분야에서 경제협력에 상응하는 진전을 이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올해 남북장성급회담 개최가 합의되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또한 서해 공동어로, 철도·도로 시험운행, 임진강 수재방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군사실무 회담도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남북군사회담은 경협을 위한 기능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군사회담의 개최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된 것은 중요하다.

한편,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상대측 지역의 방문지 제한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8.15 공동행사시 북한측 대표의 국립현충원 방문을 이유로 우리측 방북자들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 문제는 공동성명에서 남북한이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원칙적 문제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불합되었다.

17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올해의 6자회담과 남북관계 진전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추진력을 2006년에 지속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이 합의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6자회담의 성과와 남북관계 진전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 사회문화분야와 함께 군사분야에서도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혜가 요망된다. 아울러 인도주의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